

보도시점 2023. 12. 14.(목) 조간 배포 2023. 12. 13.(수) 09:00

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 접근성이 제고됩니다.

-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, 외국 증권사 등의 통합계좌 운용 편의 제고,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편의 제고 방안 12월 14일 시행
-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('24.1.1일 시행), 배당절차 개선 시장 안착 독려

내일(12.14일)부터 **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**되고, **통합계좌(Omnibus Account)*** 명의자의 **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 의무가 완화**되는 등 **외국인의 국내 투자 접근성이 제고**된다.

*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계좌에서 통합 처리할 목적으로 외국 금융투자업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
([예] 미국의 A증권사가 통합계좌를 개설하면, 미국 투자자들은 자국의 A증권사를 통해 X전자, Y화학 등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 → 미국 투자자의 국내증시 접근성 제고)

지난 1월 25일 정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**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***을 발표한 바 있다. 발표 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**관련 법규를 정비**하고 제도 구현에 필요한 **전산 개발**을 진행하였으며, 예고대로 **내일****부터 제도개선 내용이 **시행**된다.

* 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, ② 통합계좌 명의자의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즉시 보고 의무 완화, ③ 사후신고 대상 외국인 장외거래 확대, ④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

** 단,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는 '24.1.1일부터 시행

첫째, **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**된다. 그 동안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**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**해야 했다. 내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, 외국인

투자자는 **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**.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정보는 **LEI***(법인), **여권번호**(개인) 등을 식별 수단으로 관리되며, 이미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하여 **투자등록번호**를 발급 받은 외국인은 해당 번호를 **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**할 계획이다.

* LEI(Legal Entity Identifier) : 법인에게 부여되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ID('11년 G20 도입)

둘째, 외국 증권사 등의 **통합계좌 운용이 편리**해진다. 통합계좌 제도는 2017년 도입되었으나, 통합계좌의 명의자인 해외 증권사에 부과되는 **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즉시(t+2일 이내) 보고 의무** 부담 등으로 활용 사례가 없었다. 내일부터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고 주기를 “**즉시 → 월 1회**”로 **완화**하는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됨에 따라, 외국인의 통합계좌 활용이 증가하고 **국내 중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**.

* 외국 증권사 등은 통합계좌가 개설된 국내 증권사에 매월(t월) 말일 기준 최종 투자자별 투자 내역을 익월(t+1월) 10일까지 제공 → 국내 증권사는 해당 정보를 금융감독원에 t+1월 15일까지 보고

셋째, 외국인 투자자의 **장외거래가 편리**해진다. 지금까지는 금융투자업 규정 등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거래 외에는 **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** 후 장외거래가 가능하여 투자자의 심사 부담이 컸다. 내일부터 **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거래 유형***이 사후신고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,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.

* 현물배당,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질권의 실행, 실질 소유자 변경이 없는 증권 취득 ([例] 펀드 청산에 따른 현물교부로 인한 주식의 취득 등) 등

정부와 유관기관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**시장 안착을 지원**하기 위해 당분간 “**유관기관 합동 점검반**”을 운영하고, 「**외국인 투자 제도 안내서**」도 **업데이트**(12.14일, 금융감독원 홈페이지)할 예정이다.

* [구성]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한국거래소, 한국예탁결제원, 금융투자협회, 코스콤

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**나머지 제도개선 과제**도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있다. 내년 1월 1일부터 **코스피 상장사 영문 공시 의무화***가 시행될 예정이고, **결산배당 절차 개선**도 시장에 안착·확산 되도록 유관기관과 독려 중이다.

- * [대상] ①자산 10조원 이상(외국인 지분 5% 이상) 또는 ②자산 2~10조원(외국인 지분 30% 이상)
- [공시항목] 결산 관련 사항, 증자 결정 등 주요 의사결정 사항, 주식소각 결정 등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 등
- [공시시한]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

특히, 결산배당 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❶개선된 절차 운용이 가능하도록 이미 정관을 정비한 상장사(636개)들이 정비된 정관의 취지*대로 결산배당 절차를 운용하도록 독려하고, ❷아직 정관을 개정하지 않은 상장사도 정관 개정을 통해 배당절차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(12월 5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참조).

- * 「배당권자 先확정(배당기준일, 통상 12.31일) → 배당금 규모 後확정」인 현행 배당 절차를 「배당금 규모 先확정 → 배당권자 後확정」으로 개선 ⇒ 배당금 규모를 “알고 투자” 가능
☞ 단, 이사회 결정([例] 이사회에서 12.31일을 배당기준일로 결정)에 따라 배당절차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바, 제도개선 취지대로 배당절차를 운영하도록 독려 중

한편, 유관기관은 배당기준일에 대한 투자자 혼선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. 투자자들이 배당기준일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, 지난 12월 11일부터 **한국상장사협의회 홈페이지(klca.or.kr)** 및 **코스닥협회 홈페이지(kosdaqca.or.kr)**에서 배당기준일을 안내*하고 있고, 해당 안내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**거래소 전자공시 웹사이트(kind.krx.co.kr)**에서 제공하고 있다.

- * 한편, 12.31일을 배당기준일로 정하고자 하는 상장사는 **늦어도 12.16일에는 이를 공고할 의무**(상법§354.④)가 있는 바, 12.16일까지 배당기준일을 정하지 않은 상장사 명단(배당절차 개선 예상 상장사)을 정리하여 12.19일에 거래소 전자공시 웹사이트에서 별도로 팝업 안내 예정

또한, 정부는 **분·반기 배당절차 개선**을 위한 제도개선('23.4월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, 국회 계류 중)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